

민주 내년 총선 룰 '전략공천 최소화'

후보자 기준도 강화해... 경선, 국민참여방식으로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국민안심번호 50% 15년간 3회·10년간 2회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정치신인·여성·청년 등 사회적 약자 가산점 상향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4월15일 21대 총선에서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고 경선도 국민참여방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민주당은 최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1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심사 및 경선 방식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선방식 ▲권리당원 규정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정치신인·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가산점 상향 신설 등이다. 민주당은 우선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을 목표로 내세웠다. 차기 총선을 위한 선거인 명부는 내년 2월1일에 확정짓기로 했다. 권리당원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는 오는 8월 1일 이전 권리당원으로 입당해야 하며,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 사이에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 50%로 정했다. 지난달 17일 이해찬 대표가 원외지역위원장 총회에서 밝혔던 대로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운장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이외에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능력(전문성) ▲도덕성 ▲당신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하는 공천심사기준을 준수키로 했다. 민주당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화를 사전 방지하고 당의 체질 개선을 위해 정치신인에 대해 공천심사에서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수후보 선정 기준을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고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기도 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시 하위 20%에 적용됐던 가산치를 기존 10%에서 20%로 강화했다.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

가산점은 최대 25%까지, 청년과 장애인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까지 상향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 사퇴하면서 총선에 출마해 보궐 선거를 야기하게 되면 기존 10% 가산에서 30% 가산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경선 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의 가산치는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민주당은 향후 특별당규 지정을 위한 정당원 투표 등 당헌당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의 성원과 지지로 전국정당·국민정당으로 커다란 발전을 이뤘다. 그만큼 책임도 막중하다"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좋은 후보 공천으로 2020년 총선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이해찬(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왼쪽) 원내대표가 최근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매입형 유치원인 구암유치원에서 아이들과 만나고 있다.

與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속도"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 관악 구암유치원서 현장 최고위 이해찬 "국공립 유치원 비율 아주 낮아... 매입형, 좋은 사례" 홍영표 "2021년까지 매입형 유치원 30곳으로 확대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내 첫 '매입형 유치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바꾼 형태의 유치원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구암유치원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학부모와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해찬 대표는 "구암유치원은 서울 시교육청에서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운영하는 아주 좋은 사례다. 우리나라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아주 낮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서울에서 부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돈이 들어가 사립으로 쪽 운영을 해왔는데 사립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전체적으로 국공립 비율을 많이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구암유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매입형공립 유치원 첫 사례다. 작년 하반기 사립유치원 비리와 한유총 불법 집단행동으로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유치원 교육 시스템을 불안해했다"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국공립 확충 요구가 많다. 매입형 유치원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다. 교육부가 2021년 매입형 유치원을 30곳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당 차원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국공립유치원을 대폭 확대하고 교사를 추가로 선발했다. 매입형 부모협동조합형 위탁운영 유치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유치원 3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는데 자유한국당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삼인위 의결이 관부터 위촉하고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남인순 최고위원은 "구암유치원이 매입형 국공립형 유치원으로 유일한데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매입형이 활성화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서비스 개선에 대해 특례에서도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 누리과정이 7년째 동결돼있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을 확보해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국공립 유치원의 수요가 높음에도 어린이집 지원율이 21.2%로 OECD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은 국가적 과제이면서 매입형 유치원이 충분한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매입형 유치원을 위한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완비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노후 경유승용차 폐차 후 저공해차 사면 보조금 두배'

정부가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승용차를 조기폐차한 후 저공해차량을 사면 보조금을 한 차레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선 경유차를 다시 사는 '암체 구매'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기폐차 후 1~3종 저공해차를 구매할 때 추가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유차의 재구매를 줄이고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저공해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는 노후 경유승용차를 조기폐차한 후 신차 구입과 관계없이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을 받고선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다보니 '경유차 지원 보조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폐차 대행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할 계획이다. 설 의원은 "노후 경유차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며 "경유차 폐차 보조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데 대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당정이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 최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지방분권의 실질적 실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전북회의에서 송하진 도지사, 이병렬 전북도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분권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자치분권을 외며 화이팅을 하고 있다.

내일 文정부 신남방·신북방정책 점검 정책포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연다. 이번 정책포럼에는 이태호 외교부 2차관,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 신윤환 서강대 교수, 홍완석 한국외대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과 쉐빙 탐피셋판 주한 태국대사, 비탈리 펜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 등 주한 외교단 인사가 참여한다. 회의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의 개회사,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의 기조연설,

신남방·신북방정책 협력국가 주한 대사들의 축사에 이어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정책포럼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정부가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신남방·신북방정책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이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외교적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뉴시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